

국외출장 결과보고서

1 출장 개요

출장목적

o 연구 성과 확산 및 대만 지역 국제 네트워크 구축

과제명

비과제 출장

출장기간

o 2026.05.11(월) ~ 2025.5.14(목)

출장국가(도시)

o 대만 타이페이


출장자

o 김기태 연구위원

일정요약

일자	국가(도시)	방문기관	면담자	주요 활동상황
① 5/11	대만 타이페이	국립대만대학교 국가발전연구원	홍이진 교수, 대학원생 9인	digital change, social risks and social policy 주제 특강
② 5/12	대만 타이페이	국립대만대학교 국가발전연구원	홍이진 교수, Shih-Jiunn Shi 교수	대만과 한국의 사회정책 동향을 공유하고, 향후 기관간 협력 방안 논의
③ 5/13	대만 타이페이	Taiwan Fund for Children and Families	Chen Cheng-Bin 처장 등 대만 TFCF 관계자 및 일반 청중 70여명	Taiwan Fund for Children and Families가 진행하는 Social Welfare Forum에 종일 참가 출장자는 1시 세션에서 'Benefits, Risks, and Policy Directions of AI Application in Social Security' 주제로 발제를 진행
④ 5/14	대만 타이페이	귀국	귀국	

2 출장 주요내용

①	특강	
회의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자: 홍이진 교수 및 대학원생 • 일시: 5월 11일 오후 3시 • 장소: 국립대만대학교 국가발전연구원 	
회의 내용	<p><특강 내용 요약></p> <p>기술 변화는 역사적으로 생산력을 증대시키고 삶의 질을 개선했으나, 디지털화 단계에 이르러 글로벌 디지털 노동의 배제와 사이버 리스크라는 ‘3세대 사회적 위험’을 새로이 야기하고 있다. 이에 대응하여 산업, 고용·노동, 사회보장, 조세정책 차원에서 고용보장제, 비정형 노동 권리 보장, 로봇세, 기본소득 및 기본서비스 등 다양한 정책적 대안이 국내외에서 논의되고 있다. 한국은 사회보장기본계획과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통해 기술 변화에 대한 인식을 넓혀왔으며, 현재는 소득기반 고용보험 개편과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복지 행정 혁신을 주요하게 추진 중이다. 그러나 사회정책 차원의 통합적 대응 체계는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향후 정책 방향은 성장주의에서 벗어나 인간 존엄을 보장하는 인본주의적 접근을 취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취업 형태와 관계없이 개인 실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소득기반 사회보험 체계로의 전면적 전환을 가속화해야 한다. 아울러 장기적인 탈노동 사회와 세원 잠식에 대비하여 로봇세 등의 신규 조세 체계를 모색하고, 데이터 편향성에 대응할 윤리적 거버넌스 및 사이버 사회적 위험에 대한 공적 보호 체계를 민주적 통제 아래 구축해야 한다</p>	
②	면담	
회의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자: 홍이진 교수, Shih-Jiunn Shi 교수 • 일시: 5월 12일 오후 1시 • 장소: 국립대만대학교 국가발전연구원 	(사진 촬영 하지 않음)
회의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만의 경우, 국가적 특수성 때문에 해외와의 학술적인 교류를 매우 독려하는 분위기이며, 문화적으로도 매우 개방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음. - 대만과 한국은 일본의 식민지배, 식민 지배 이후 군사정권의 장기집권, 1980년대 이후 민주화 운동, 1990년대 복지국가의 형성 등 역사적인 유사성이 강하고, 오랜 유교문화적인 전통, 강한 IT 기반 산업 구조 등 경제문화적인 특징을 공유하고 있음 - 사회정책의 측면에서도 서구의 복지제도를 수입하는 과정에서 유연한 제도 변용을 통해서 나름의 제도적인 질서를 완성한 유사성도 있음. 앞으로 양국간, 양 기관간 협력의 여지가 클 것으로 기대됨 	

<p>③</p> <p>회의 개요</p>	<p>포럼 발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자: 대만 TFCF 관계자 및 일반 청중 • 일시: 5월 13일 오후 1시 • 장소: 대만 TFCF 건물 강당 	
<p>회의 내용</p>	<p><발제 요약></p> <p>사회보장 분야에서 인공지능(AI) 기술의 도입은 행정의 효율성, 적시성, 정확성을 높이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순기능을 지닌다. 다수의 국가에서 급여 자격 심사, 지급 자동화, 챗봇을 통한 맞춤형 서비스 등에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데이터와 알고리즘의 편향성으로 인한 취약계층 차별, 프라이버시 침해, 설명 불가능성 등의 위험성도 공존한다. 네덜란드의 부정수급 예측 시스템(SyRI)이나 호주의 로보데트 사건 등은 기술 오용이 초래한 대표적인 인권 침해 및 행정 오류 사례다. 따라서 향후 정책 방향은 데이터 품질 개선과 기관 간 통합·연계를 추진하되, 철저한 보안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 또한, 편향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가이드라인을 구체화함으로써 신기술의 위험을 통제하고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균형 잡힌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p>	